

---

# 브라질,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향해 변화를 심화시키다

아르투르 앙히키 |  
브라질 단일노조(CUT: 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 위원장

---

브라질의 경제 성장으로 공식 노동자의 숫자가 나날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현재의 목표는 소득 분배, 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 사회적 포용 그리고 불평등 축소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 글은 노동 조합운동의 과제가 양질의 관리 및 투명성과 더불어, 기획과 지속성을 지니는 강력한 국가 모델 구축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브라질 노동계급은 장기간 경험해왔던 시기와는 아주 다른 시기를 겪고 있다. 그 시기란 오늘날 북반구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구별된다.

브라질 경제는 현재 성장 중에 있으며 임금노동자의 수 역시, 비록 마땅히 그 래야 하는 것보다도 적고 또 필요한 것보다도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식 노동량은 역사적인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결국 현 시점과 차후 몇 년간의 노조운동이 직면할 과제란, 남녀 근로자의 노

동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이자,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급진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후호적인 현 시기를 잘 활용하고 임금의 구매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고용의 질 향상이란, 여타 다른 민주화 대책 및 권리 확대 가운데에서, 노동자들의 능력 향상, 성(性)과 인종 간의 동등한 권리, 단체협상 보장 확대, 작업장에서 노조 구성 보장 등을 포함한다.

최근의 여러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최악의 소득 분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사회적 고질병이 존속하는 한, 브라질이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드는 것을 축하할 수는 없다.

요약하자면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 경제 성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 경제 모델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미 소진된 상태라는 걸 보여주었음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 성장과 생산, 소비 모델을 유지할 경우 지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는 최고의 방법이란 세계은행과 IMF, 유럽중앙은행과 미연방준비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이 제안하고 있는 국제 금융위기 대처 방안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악화시킬 것이며 지구의 파괴로 이끌 것이다. 결국 그런 식으로 갈 경우 우리는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할 때, 그 발전은 경제 성장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지 국민총생산(GDP)의 증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었다. 즉 GDP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소득 분배, 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 사회적 포

용, 불평등 축소를 이룩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포커스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경제 성장만을 주목표로 삼을 수 없다. 그 새로운 모델의 창출에 방향을 제시해줄 네 가지의 주요 지지대, 즉 사회적·환경적·경제적·정치적인 4개의 지지대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생각, 가치와 문화 그리고 관례의 변화를 요구한다.

현재 브라질과 여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수립되었던 모델의 대안 구축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대안의 대상이 된 그 모델은 1980~90년대에 수립되었는데, 이 무렵 신자유주의 헤게모니가 부상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정되어 경제 성장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발전 프로젝트를 사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 발전 프로젝트로 우리는 사회복지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막 부상한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는 스스로의 역할을 경제 활동의 조절에 한정하고, 모든 문제는 시장이 해결한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전 세계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모델은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것임이 드러났다. 오늘날 10억여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에너지 및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라틴아메리카, 특히 브라질의 경우는 이미 말했듯이 경제 성장과 사회적 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3,500만의 브라질 국민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 이 시점에 아주 넓은 의미에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교육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의 투자도 그러하다. 물론 이것은 신자유주의, 소비 중심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의 가치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보다 적은 천연 자원의 이용으로 국민 다수를 위하여 어떻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를 찾아내기 위함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과 혁신, 과학과 기술에의 투자는 인간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소비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가치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소비 패턴을 의미하는가? 최소한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가구당 3~5대의 자동차 소유를 목표로 했던 미국인의 소비 패턴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의미하는 걸까? 결국 우리는 사회 조직을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 보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전환이 사회에, 특히 노동자들에게 충격을 야기한다는 것(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전환을 공고히 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환의 종착지에 대한 기획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위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전환이 노동과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야기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모델이, 전통적으로 선거 때면 벌어지는 급격한 변화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브라질에서는 4년마다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가 개념을 바꾸고 이전의 프로젝트를 중도에 버리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모든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착 그리고 급진전이 갖는 근본적인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의 발전 모델이 양질의 관리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기획과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델을 구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통제는 프로젝트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선발된, 사회 각 분야 대표의 활발한 참여를 기점으로 가능할 것이다. 사실은 그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 주체의 참여는, 우선적인 사업과 목적 그리고 수혜 받을 일

반인을 확정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향후 진행될 수단의 구축 행위와, 목표를 지켜보며 감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분명한 메커니즘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훌륭한 목적과 제안, 좋은 의도의 기획이라고 할지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위험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행정 그 자체를 포함하여 가치의 변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오로지 시장으로만 눈을 돌리고 있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과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정의로 눈을 돌려야 한다. 또한 하나의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한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도전에서 사회운동은 우리가 원하는 국가 모델에 대한 통제와 사회적 참여라는 새로운 문화의 전개를 감시하고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사회운동은 다수인 노동자 계급의 대표로서 국가 모델 통제에 참여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이것은 노동자들과 광범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른 예를 들자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 생산의 지배력이 그러하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화물차나 버스 또는 필요하다면 전 기자동차까지도 생산하도록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시장은 노동자나 사회 혹은 국가가 아닌, 기업을 위해 생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 존재한다. 즉 국가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초월한 위치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국가이지 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반복하건대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틀 안에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을 취하는 사회운동의 활동 영역 구축이 필요하다. 그 영역은 정

치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통제 강화 역시 필요하다.

신노동자계급으로서<sup>1)</sup> 우리 역시 사회적 통제의 참여자라는 입장에서 볼 때, 동 계급에 내재하는 문화적 가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단일노조(CUT)와 노조운동의 향후 20년을 위한 논의를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노동자계급이 개인주의, 소비주의와 같은 가치와 더불어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것을 더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신문화와 개념에 함몰된다면, 이런 노동자계급을 양성하고 재생산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노동자들의 비판의식을 고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들은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인 것, 즉 연대의식과 커뮤니티와 같은 가치를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작업장에서부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포괄하여 노동자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어떤 전략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정당적 차원의 세계에서 힘들의 상관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그러한 변화를 성취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은 지금 정치 개혁을 추진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그 개혁이란 각종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권력과 선출된 자들의 임기 수행을 자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인데, 선거 유세 비용의 전부를 공공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과, 개별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아닌 정당 명부 투표제라는 두 가지 지지대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위해 단일노조(CUT)는 제안서를 마련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에 제시한 것 외에도, 정치 개혁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1) '신노동자계급'은 신중산계급보다 더 적합한 용어로서, 브라질에서는 소비 시장에 도달하고 있는 브라질 사람들을 정의하기 위해 미디어가 사용한 용어다.

선거 유세에 대한 사적인 재정 지원을 중단시키면 일반인 부문, 즉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가 서로 경쟁하고, 선출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는 국회의원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확대하려는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자극하는 데 중요하다.

조세 개혁은 브라질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를 뒤집고 새 우선 정책을 창출하는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또 다른 변화다. 오늘날 브라질의 조세 부담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조세 부담과 맞먹는다. 문제는 강한 국가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세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다. 오늘날에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며 고소득층은 적은 세금을 낸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조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도록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조운동 자체가 변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단일노조는 노조의 자유와 자율권을 추구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인준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창립 이후부터 줄곧 추구해왔다, 그리고 필자는 우리가 현재 그 변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동 주제의 진전을 위해 새로운 홍보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세금 징수를 폐지하고, 그 세금을 단체협상 개인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체협상 개인분담금은 전체 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승인될 것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표 노조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표성도 없고 활동도 없는 노동단체를 양산하는, 현 브라질의 노조 제조 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진일보가 될 것이다.

그러한 진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노조 관행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작업장에서의 조직을 공고히 하는 것, 즉 기업이나 공공기관, 상업

과 여타 다른 경제 활동 부문 내부에 노조가 상시적으로 활동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모습을 드러내 활동하는 것이 보장될 것이다.

향후 몇 년 후 단일노조와 브라질 노조운동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필자는 우리의 목적이 국가 GDP 상에서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정치 및 계급의식을 확대하며 우리의 시각이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결정에 반영 되도록 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노동자를 규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통제가 스며들으로써 점점 더 강하고 민주적인 국가가 이룩되면(거기에는 모든 사회 부문이 참여할 것이다) 그다음 목표는 소득 분배 및 비대칭적인 상황의 극복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다.

\_ 박원복 옮김

원제와 출처

Artur Henrique. 2012.

“Aprofundar mudanças rumo a um modelo de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Nueva Sociedad* especial em português(junho): 20-26.